

식품업계, 실적개선 흐름 뚜렷... 고환율·수급차질 '복병'

해외사업 비중 높은 기업 약진 '중동 리스크' 비용압력 본격화 2분기 실적둔화 위기감 고조

국내 식품업계가 올해 1분기 수출 호조와 원재료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환율과 포장재 수급 차질, 급변하는 바이럴 트렌드에 따른 비용 상승 등 '3중고'가 가시화되면서 2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국제 밀 가격 하락과 해외 사업 확장,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 포장재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6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오리온 역시 중국 춘제 효과 등으로 17.2% 성장이 접쳐진다. 농심과 오뚜기도 각각 7.4%, 5.2%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된 곳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정부 기조에 맞춘 밀가루·설탕 가격 인하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상은 중국산 저가 라이신 공세로 바이오 부문에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된 비용 압박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필름·PET 등 포장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68%나 폭등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단가는 이달 들어 20~30% 인상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30원까지 치솟으며 수입 원재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식품업체들은 포장재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자재 재고가 소진되는 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비닐 포장용 종이 등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설비 변경 비용과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운임이 오르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3월 중동 지역 식품 수출액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심의 빠른 '바이럴 트렌드' 대응 역시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두바이 초콜릿'이나 '피스타치오' 등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는 '추

격형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에 맞춘 잦은 생산라인 조정과 원재료 수급 경쟁은 단기 매출 상승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흥행 실패 시 재고 부담과 R&D 비용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원가 구조의 안정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특산물 수급을 위해 산지와 계약을 맺어 원재료 수급 안정성과 제품 차별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유행이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 트렌드 추종보다는 내부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을 꾀하는 것이 중장기적 수익 방어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1면 '정부차원 자본시장 투자' 계속

"상반기 중 설립방안 마련"

민간 참석자들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의 투자유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투자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금융위·산은 쪽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금융·투자수단과 한국판 국부펀드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시 전략산업 육성,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설 재경부 실장은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실을 국부로 축적해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 실장은 "재경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적극 참고해 상반기 중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부,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공급망 재편 속도낸다

한 달간 공고... 6월 마무리 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대상

정부가 핵심 민간기업 위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주체인 '선도사업자'에 대한 2026년도 신규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를 가리킨다.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아 지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9일 세종 전의면의 한 필름생산업체를 찾아 공장 자동현황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2024년 6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30일부터 한 달간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6

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29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항목에는 경제안보 품목과의 연

관성, 도입선 다변화 전략, 재무 및 이행 능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화 계획을 제시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이승욱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 공급망의 취약·병목 지점이 드러난 만큼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선도사업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상의, ESS 설치 기준 등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기업현장·민생분야 139건 정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과 민생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법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 충돌 문제가 제시됐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닫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안전관리

규정은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문을 두고 상반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창고 임대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목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입주만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민생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지정 품목에 포함돼 있어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 중단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체품목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통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우편 발송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국내 상장사가 발송하는 주주총회 우편물이 1억 장에 달한다며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성장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SS는 안전 관리가 중요하지만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입지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SS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 탑승 시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섬유·염색업 중심 산업단지에 세탁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社告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